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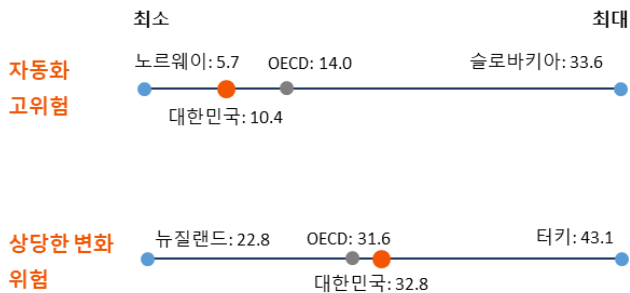
일의 미래

대한민국 노동시장 국제비교

고용전망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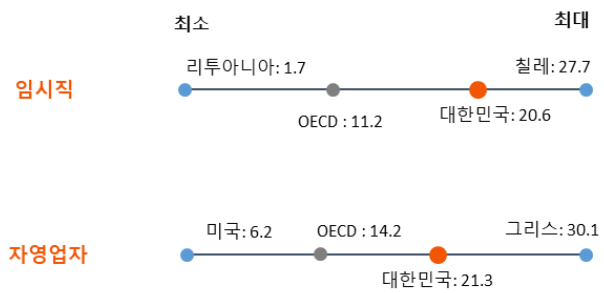
자동화 위험과 일자리



주석: 자동화 고위험은 70% 이상의 자동화 가능성을 의미함. 상당한 변화 위험이 있는 일자리는 50%~70% 사이의 자동화 가능성을 의미함. 데이터는 국가에 따라 2012 년도 또는 2015 년도가 사용됨.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https://doi.org/10.1787/9ee00155-en>.

비전형적 일자리



주석: 임시직 고용은 임금근로자(dependent employment) 대비 비중임. 자영업자는 총고용(total employment) 대비 비중임. 데이터는 2017 년도임.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https://doi.org/10.1787/9ee00155-en>.

일자리의 양은 줄어들지 않겠지만 근로자간 일자리의 질 및 격차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변화 및 세계화가 초래하는 일자리 파괴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고용에 있어 급격한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어떤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지만 (14%가 OECD 에서 자동화 고위험 일자리임) 또 다른 일자리가 생성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 생성되고 있는 일부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즉각적인 행동이 없다면 일부 근로자들은 다른 집단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확대될 수 있다.

- 기술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약 43%가 새로운 기술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가 완전히 자동화 될 고위험 또는 실질적인 변화를 겪게 될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비전형 근로의 높은 비중과 함께 상당히 분절된 모습이다.

임금근로자의 약 21%가 임시직이며, 자영업자는 총 고용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을 상당히 상회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도전은 노동법상의 보호를 정규직을 넘어 확대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규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많은 비전형 근로자들은 취약하거나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전형 근로자들을 위한 권리나 보호는 다음과 같이 강화될 수 있다. 근로자로서의 종사상 지위를 잘못 분류하도록 하는 세금상의 인센티브를 축소시키는 것을 포함해 위장 자영업자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 플랫폼 노동을 포함해 자영업과 임금근로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는 고용형태까지 보호 영역을 넓히는 것, 사용자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해소하는 것이다.

- 비전형 근로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더욱이 플랫폼 경제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고용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 대한민국은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

- 2019년 1월 대한민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용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또한, 대한민국은 사회안전망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실업부조도 도입할 예정이다.

비록 상당한 압력 속에 있지만 단체교섭은 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체교섭은 근로자와 기업이 새로운 권리를 확정하거나 신기술을 채택하고 규제하며,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적응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수십년 간 이어진 노동조합의 대표성 약화로 사용자를 명확한 상대방이 없는 상태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형 근로의 증가로 도전받고 있다. 비전형 근로자를 보다 잘 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규제상의 적응과 사회적 파트너들의 보다 강한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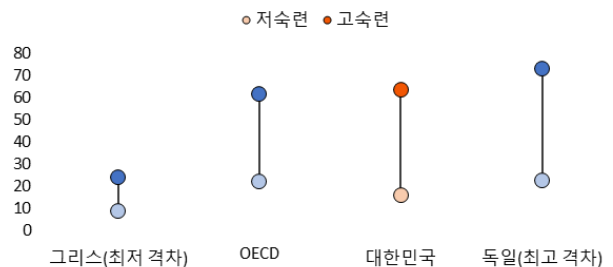
- 대한민국은 근로자 중 노동조합 조합원의 비중이 1985년 12.4%에서 2017년 10.5%로 하락하였다. 단체협약 적용률도 1985년 14.5%에서 2016년 13.1%로 하락하였다.
- 최근 몇 년간 골프장 캐디, 택배 배달원과 같은 일군의 비전형 근로자들은 법원 판결이나 행정절차를 통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법에 새로운 고용형태를 감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 한국의 노동조합은 일부 경우 비전형 근로자가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섭 행태를 변화시켰다. 가령 정규직과 비전형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률 임금인상 대신 정액 임금인상을 촉진하는 연대임금 전략을 시도하였다.

성인학습은 취약계층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성인학습은 평생 직업생활에 걸쳐 개인이 자신의 직업능력을 유지하고 향상하도록 도와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나라의 성숙학습시스템은 이러한 도전에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 OECD 평균 40%의 성인이 주어진 연도에 직업 관련 훈련을 받았으며,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해 가장 훈련이 필요한 계층이 가장 적게 훈련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훈련도 항상 고품질은 아니다.

- 2012년 대한민국은 단지 38%의 성인만이 지난 12개월동안 직업 관련 훈련에 참가하였다. 저숙련자는 고숙련자에 비해 직업훈련에 덜 참여하였다. 이러한 저숙련자와 고숙련자간 훈련 참여 격차는 약 48% 포인트에 이르며 이는 OECD 평균(39% 포인트)을 상당히 상회한다.
- 2019년 1월 대한민국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약 100,000 명의 중소기업 및 비전형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민국은 유연학습 분야에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좋은 성과를 보인다. 이는 특히 직업훈련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근로자들의 훈련참여를 증가시키는데 이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직업훈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강한 문화를 배양함으로써 훈련의 질을 담보해 나갈 필요는 있다.

저숙련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성인훈련시스템



주석: 지난 12개월 동안 훈련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냄. 데이터는 2012년도 또는 2015년도임.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https://doi.org/10.1787/9ee00155-en>.

